

국민행복,

희망의 새시대

2013년도 업무추진계획

여성행복, 가족행복, 국민행복  
여성가족부가 앞장서겠습니다

2013. 3. 29.



여성가족부

Ministry of Gender Equality & Family



# 목 차

---

**I. 정책환경 및 추진방향 ..... 1**

**II. 국정과제 실천계획 ..... 7**

1. 여성이 행복한 사회 ..... 9

① 일하고 싶은 여성 누구나 당당히 일할 수 있는 사회

② 일과 가정의 양립

2. 꿈을 펼치는 청소년, 희망을 키우는 가족 ..... 21

① 청소년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

② 취약가족의 어려움을 메워 주는 가족 도우미

③ 다문화 가족의 따뜻한 이웃

3.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조성 ..... 33

① 성폭력 예방체계 강화

② 성폭력·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

**III. 부처 간, 민-관 협업 과제 ..... 41**

① 여성정책조정회의의 내실 있는 운영

②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

③ 경력단절여성 전문 직업능력개발 강화

④ 여성가족부 3.0



# I . 정책환경 및 추진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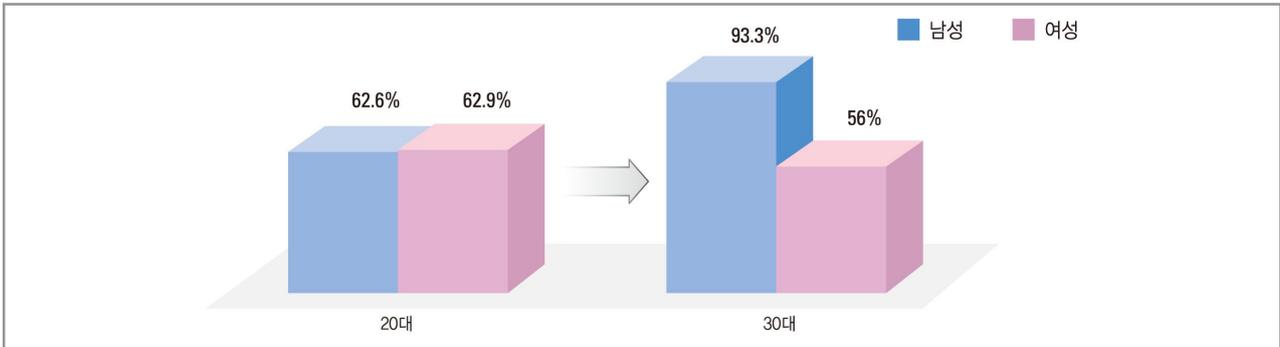




# 1 2013년 정책환경

## □ 2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남성 추월

- 반면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하향, 출산·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 여전히 심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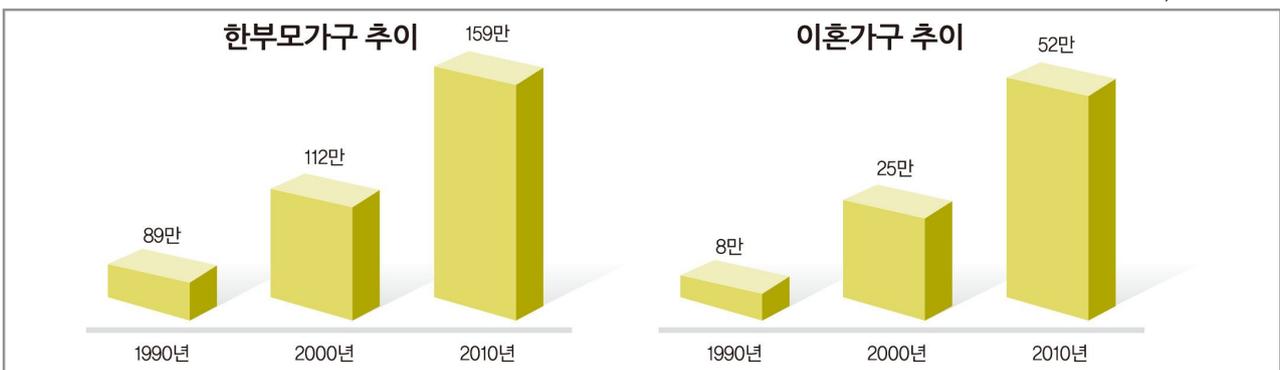
\* 자료 : 2012 경제활동인구조사(통계청, 고용노동부)

## □ 육아·가사 참여는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

- 여성 취업 장애요인 조사에서 육아 및 가사부담 비율 52.6%
  - \* 맞벌이 가구의 가사참여시간 : 남편 24분, 아내 2시간 38분(생활시간조사('10), 통계청)
- 장시간 근로관행과 돌봄지원 취약, 남성의 육아·가사 참여 저조는 일·가정 양립, 아동발달 등에 부정적
  - \* 남성의 육아·가사 참여를 위한 정책으로 남성은 “장시간 근로관행 개선”을 1순위로 꼽아('12년 여성정책수요조사)

## □ 취약가족의 증가, 든든한 사회안전망 조성 필요

- 이혼가구 증가 등으로 한부모 가족, 조손 가족 등 취약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나 양육비 이행은 부족한 실정
  - \* 법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 후 정기적인 이행비율 26.3%(자녀양육비 이행관련 실태조사('10), 여가부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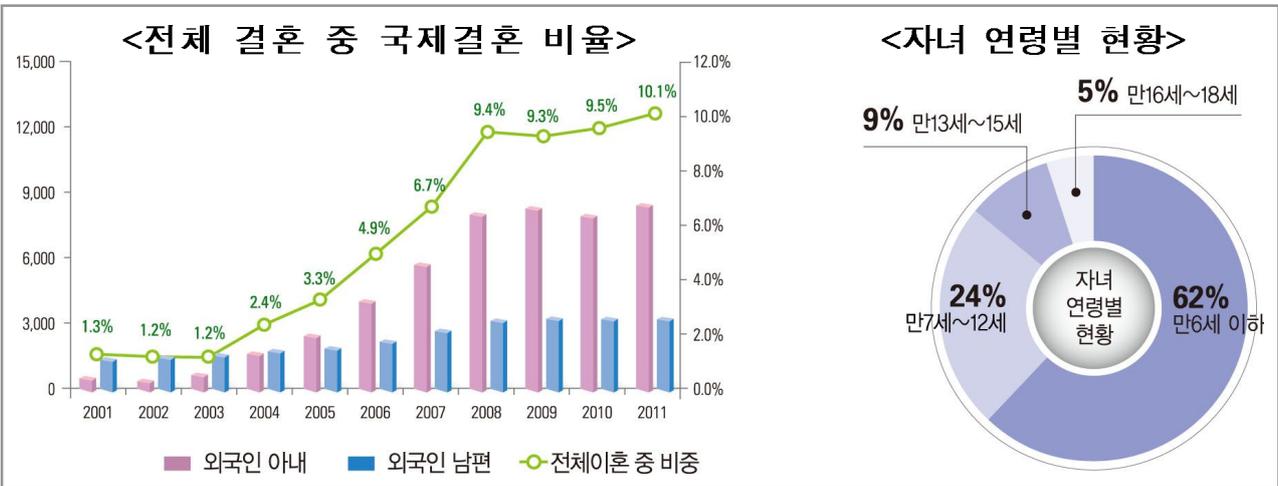
\* 자료 : 2011 혼인·이혼 통계(통계청)

□ **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기능 강화 시급**

- '12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경험이 있다는 답변자 32만명(전체학생의 4.8%)
- 연간 3만여명(경찰청 가출청소년 신고통계)의 가출 청소년이 발생하고 있으며, 최근 5년간 학업중단자 누적인원은 19만여명으로 추정
-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(안행부, '11년) 결과 고위험군은 2.9%인 19만명, 잠재위험군은 7.5%인 49만명

□ **다문화사회 10년, 자녀양육과 해체 등 새로운 문제 대두**

- 꾸준한 국제결혼으로 다문화가족은 지속 증가
  - \* 결혼이민자 : ('09) 17만명 → ('10) 18만명 → ('11) 21만명 → ('12) 22만명
  - \* 다문화가족 자녀 : ('09) 11만명 → ('10) 12만명 → ('11) 15만명 → ('12) 17만명
- 반면, 상대방에 대한 이해부족, 가족 갈등으로 이혼 증가 등 다문화가족의 해체 증가



\* 자료 : 2011 혼인·이혼 통계(통계청) / 2012 외국인주민 현황조사(안행부)

□ **성폭력 피해자 급격 증가, 통합적 지원 필요**

- '07~'11년 4년간 성폭력사범 96% 증가(법무부)
  - 전체 성폭력 범죄자('07년 9,632명 → '11년 18,880명)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('07년 2,062명 → '11년 3,978명) 모두 두배 가까이 증가

비전

여성 행복 · 가족 행복 · 국민 행복

정책  
목표1. 일하고 싶은 여성  
누구나 당당히  
일할 수 있는 사회2. 가족 구성원  
모두가 행복한  
사회3. 여성·가족이  
안전한 사회국정  
과제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 
맞춤형 일자리 확대  
(과제 68)② 미래 여성인재 10만  
양성(과제 68)③ 가족 친화적 직장  
문화 조성(과제 68)④ 아이돌봄 서비스  
확대 및 품질관리(과제 66)① 위기청소년 눈높이  
보호 지원(과제 45)② 청소년의 창의성 및  
글로벌 역량 강화  
(과제 45)③ 취약가족 지원 확대  
(과제 44)④ 다문화가족 적응력  
제고(과제 50)① 성폭력·가정폭력  
예방 교육 및 활동  
내실화(과제 83, 84)② 성폭력 피해자  
원스톱 지원체계  
확대(과제 83)③ 성범죄자 단속 및  
처벌 강화(과제 83)일하는  
방식의  
전환

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 
협업을 통한 시너지(부처간, 민·관간)  
IT 및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방식의 국민소통



## II. 국정과제 실천계획





# 1. 여성이 행복한 사회



① 일하고 싶은 여성 누구나  
당당히 일할 수 있는 사회

---

② 일과 가정의 양립

---



## 과제 1 일하고 싶은 여성 누구나 당당히 일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.

### 현장의 목소리

- ◇ “대다수 직장여성이 '마미트랩(엄마의 덫)'에 걸려 직장 5~10년차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.” (패션·유통업계 직원)
- ◇ “OECD 26개 회원국 중 여성이 출세하기 가장 어려운 국가 '대한민국’” (영국 '이코노미스트'의 '유리천장 지수(glass-ceiling index)' 꼴찌, '13년)
- ◇ “기업의 79%가 '남녀간 직무능력 차이'가 없다고 평가하나, 여성 임원이 1명이라도 있는 기업은 4곳 중 1곳에 불과” (여성인재 활용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, 대한상공회의소, '13년)

### 국정과제 이행을 통한 변화

- ◆ 경력단절여성의 특성(연령, 학력 등)을 고려한 빈틈없는 취업 서비스로, 다시 일하고 싶은 꿈을 실현하겠습니다.
- ◆ 여성들이 공정하게 평가받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겠습니다.
- ◆ 일하는 여성이 당당하게 조직 내 핵심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직한 멘토가 되겠습니다.

# 1 경력단절 여성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하겠습니다.

## 1 「새일센터」를 통한 종합서비스제공 및 센터 확대

- 경력단절여성의 특성(연령, 학력 등)을 고려한 대상별 특화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    - 기본형인 취업집중형 외에 자립지원형(결혼이민여성, 장애여성 등), 경력개발형(고학력 여성), 창업집중형 등 대상별 특화형 새일센터 확충
- \* ('12)100개소 → ('13)120개소

### < 새일센터 유형 >



- 새일센터 확충 등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로 연간 16만명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
  -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여성 대상으로 지속적인 취업 유지를 위한 ‘취업자 고충 관리 사업’을 실시하여 중도 탈락 방지

## ②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

- 경력단절여성의 숙련 수준에 맞는 직업교육훈련 강화
  - 직업역량 수준에 맞는 단계별 초·중고급 직업훈련지원 및 장기간 노동시장 이탈로 직업의식이 낮은 경력단절여성 대상 직무소양교육 지원
  
- 질 좋은 일자리 취업을 위한 전문 직업능력개발 강화
  - 기술·IT 등 남성 중심 및 선도 분야의 진출을 희망하는 여성을 위하여 폴리텍 대학, 전문대학 등과 연계한 전문기술 과정 확대
  
- 소규모 창업을 꿈꾸는 여성의 성공적인 창업 지원
  - 새일센터 교육훈련 수료자에게 본격적인 창업에 앞서 창업을 경험할 수 있는 '창업 준비교실' 등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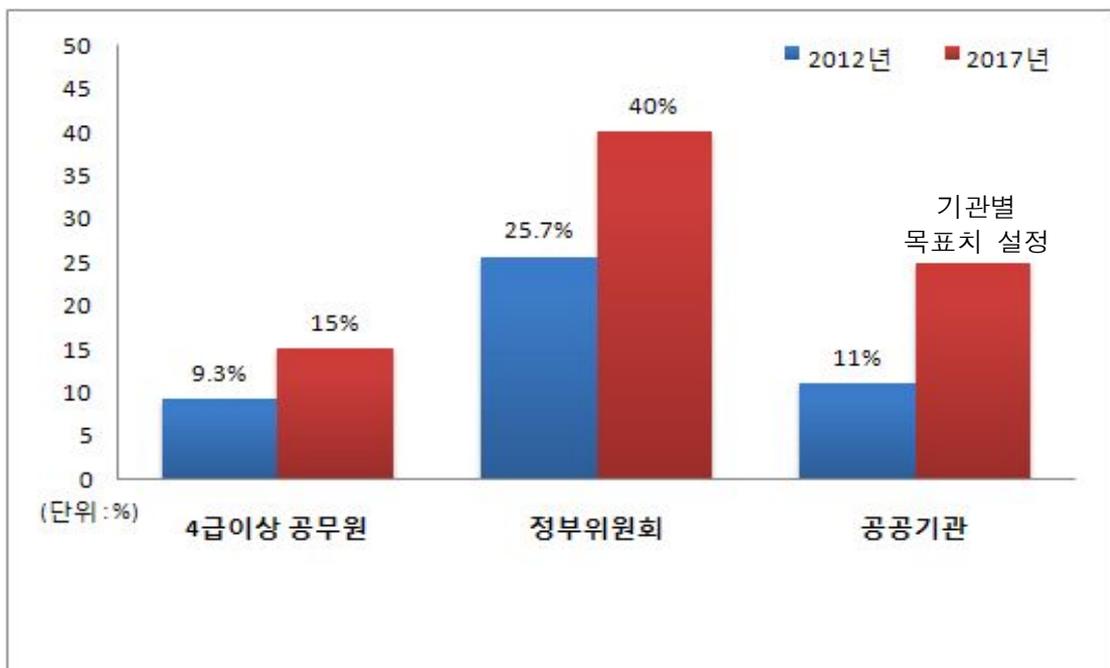
## 2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을 없애겠습니다.

### 1 공공부문 여성관리자 확대

- 관리직(4급 이상) 여성공무원 확대('12년 9.3% → '17년 15%) 추진 및 평가 반영으로 내실 있게 추진
- 공공기관의 자체적인 여성관리자 확대 노력 제고를 위해 기관별 목표제 수립 및 경영평가 반영
  - \* '12년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비율 평균 11%
- 각급 학교에서 여교장, 여교수 비율 제고를 위해 '대학교육 역량 강화사업' 및 '시·도 교육청 평가' 반영

### 2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 제고

- '부처별 확대계획' 수립('13.6월) 및 이행 현황 점검 등을 통해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 '17년까지 40% 달성
- 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



### 3

## 사회 각 분야에서 준비된 여성리더가 양성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.

### ① 「여성인재 아카데미」 설치·운영

- 중간관리자가 미래 핵심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지원
  - 중소기업과 전문직 여성들도 대기업에 비견되는 경력개발과 리더십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 프로그램 운영
  - 워크숍 등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회선배 및 중간관리자와 교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

### ② 여성인재풀 확대

- 경제·금융, 문화·예술, 이공계 분야와 민간 기업·지역 인재 등을 적극 발굴
  - 성장 잠재력이 있는 실무형 창의적 인재까지 포함하여 여성 인재풀 확충
    - \* '12년 현재 3만명 → '17년 10만명
    - \* 여성인재풀 확충 계획 수립('13.3월), 국가인재DB시스템 개편(~'13.12월)
- 정부위원회, 공공기관 임원 추천과 리더십 교육 및 네트워크 지원 등을 통해 여성 인재풀의 활용 강화
  - \* 전경련, 경총, 여성단체, 연구기관, 학회 등에 여성인재DB 활용 안내·홍보('13.6월)

## 4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.

### 1 국제 성평등지수 제고

- 성평등 수준이 낮은 '경제참여' 및 '의사결정' 분야 중점 관리

< 세계경제포럼(WEF)의 성격차지수(GGI) 현황 >



### 2 국제사회와의 연대 및 협력 강화

- 개도국 여성인권 증진과 역량 강화, 분쟁지역 평화구축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
  - \* UN Women 기여금 규모 확대('11년 세계 13위 → '17년 10위)
- 안보리 결의 1325 국가행동계획 수립('13.6월),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중간보고서 제출('13.7월) 등 국제사회 이슈에 적극 참여
  - \* 시민사회단체·전문가가 참여하는 이행 점검 및 평가
  - 국제전문 여성인턴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지원('12년 32명→'17년 70명)
- 우리나라의 여성정책 경험이 축적된 한국형 ODA 사업 확대
  - 우수 여성정책 사례를 특화하고 수원국의 요구 반영
    - \* '여성 직업능력개발', '성매매 피해여성 자활프로그램', '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시스템' 등 우수 정책사례 개도국 확산

## 과제 2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.

### 현장의 목소리

- ◇ “중소기업들이 가족친화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**중소기업의 현실에 맞는 인증기준**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”(A기업 인사부서 부장 ○○○)
- ◇ “아이돌봄 서비스가 **가사일을 지원**하지 않아, 밤늦은 퇴근 후에 가사일까지 하고 나면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.”  
(‘12.5월 국민신문고 민원인 김○○)
- ◇ “처음 보는 낯선 분에게 아이를 맡기기가 불안하지 않게 **돌봄 활동을 점검**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.”(‘12.11월 국민신문고 민원인 배○○)

### 국정과제 이행을 통한 변화

- ◆ 가족친화 기업 인증제도를 확대하고, 정시퇴근 문화를 정착시켜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.
- ◆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인증기업 인센티브 발굴 등 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.
- ◆ 수요자의 여건과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.

# 1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만들겠습니다.

## 1]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내실화 및 확대

- 인증기업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공
  - 산업통상자원부·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협의('13.3월~)
  - \* 인증기업 인센티브 현황('13.3월 현재) : 조달청, 중소기업청 등 22개 기관 72개 사업 참여시 가점·우대 등
-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 경영 활성화
  -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인증기준 마련('13.10월)
  - \* 가족친화기업 인증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('13.5월~)
  -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시행하는 중소기업 대상 정부지원 확대('14~)
- 일·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
  -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 실시('13.3~6월)
  - \* 민간기업·공공기관 대상, 전국 9개 권역별 11회
  - CEO좌담회, 가족친화포럼 등을 통한 기업 경영층의 인식 개선 유도('13.3월~)
  - 정시퇴근 문화 확산을 위한 '가족사랑의 날' 캠페인 활성화('13.4월~)
  - \* 공공부문 '가족사랑의 날' 확대 시행 유도(주1회 → 주2회), 정기적 모니터링

## 2] 정부지원사업 선정 시 가족친화정도 반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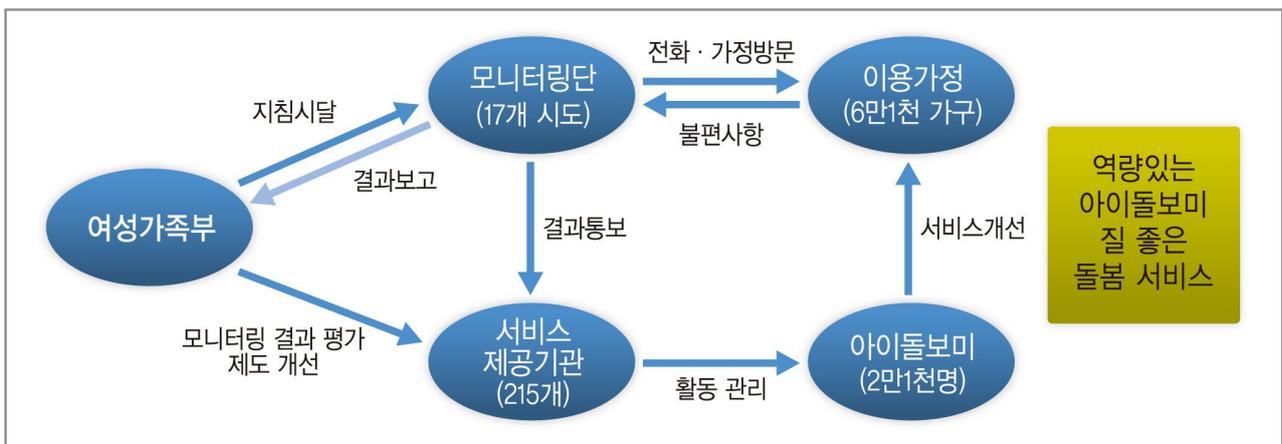
- 정부사업 참여기업 선정기준에 육아휴직 등 일·가정 양립 지원 정도를 반영하는 방안 검토(여성정책조정회의)
    - \* 유사사례 : 환경영향평가, 교통영향평가, World Bank(Gender Tracking System)
- World Bank는 각국에 지원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'Gender Guidance'를 통해 '분석-실행-평가' 단계에서 해당 사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
- 일·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사업 대상으로 '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' 검토

## 2 일하는 부모의 자녀 걱정, 아이돌보미가 덜어드리겠습니다.

### 1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

- 가정 양육이 바람직한 0세아 대상 종일제 돌봄 제공 및 야근 등 긴급한 일시적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**시간제 돌봄 확대**
  - \* 정부지원 : ('12) 3만2천 가구 → ('13) 4만9천 가구(시간제 1만7천 가구 확대)
- 나홀로 방치되는 초등학교 **방과후 아동 돌봄 지원 시간 확대**
  - \* ('12) 연간 480시간 / 1일 2시간 → ('13) 연 720시간 / 1일 3시간
- 아이돌보미 신규 충원으로 **21,000명 활동**
  - 보육교사 등 자격증 소지자 우선 채용, 양성교육 면제
  - 육아 경험이 있는 중·고령 여성에게 '아이돌보미' 일자리 제공
- 아이돌봄 서비스 품질 향상 및 부모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**서비스 모니터링단 운영**
  - 전화 모니터링 및 가정방문을 통해 이용자의 불편사항 상시 파악, 서비스 개선(모니터링 전문인력 17개 시·도 배치)

< 아이돌봄 서비스 모니터링 운영체계 >



- 베이비시터 양성·보수교육 및 DB 구축을 통해 민간분야 돌봄 서비스 사후관리 강화

## ② 서비스 유형 다양화

- 부모의 여건과 아동의 특성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를 자녀 돌봄형, 가사추가형, 보육교사 파견형 등 다양화
  - 전문가 자문 및 이용자 의견수렴,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도입방안 마련
  - 서비스 제공 운영세부기준 마련, 시범 실시 및 평가('13.8~12월)
    - \* 보육교사 : 보육교사 확보방안 복지부와 협업 추진(보육교사교육연합회, 보육진흥원(보육교사 자격증관리) 등의 공유 인프라 활용 홍보 전개)

## ③ 방과후 돌봄 강화

- '방과후아카데미'를 운영하여 저소득층, 한부모, 맞벌이 가정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학업지원·급식·체험활동 등 돌봄서비스 제공
  - \* ('13) 200개소 8,200명 이용 → ('17) 500개소 2만명
- 관계 부처간 돌봄서비스 통합지원체계 구축·운영(교육부·복지부 협조)
  - \* 6개 지역 시범운영 : 돌봄종합안내, 공동수요조사, 사각지대 해소, 지역협의체 구성 등

## 3 자녀 돌봄, 공동육아나눔터가 돕겠습니다.

- 양육정보 교환 및 장난감 대여, 가족품앗이 활동 등을 지원하는 '공동육아나눔터' 운영
  -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내 도서관, 아파트, 주민센터 등 유휴공간을 공동육아나눔터로 적극 활용('13년 26개 지역, 67개소)
  - \*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지원(여가부-삼성생명 MOU 체결)  
( '13~'17년까지 5년 동안 연 5억원, 총 25억원 지원)

[공동육아나눔터] 자녀 돌봄,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장난감·도서 대여, 자녀 양육 경험 교환, 이웃 간 자녀양육부담을 나누는 '가족품앗이' 활동 연계 지원

## 2. 꿈을 펼치는 청소년, 희망을 키우는 가족



- ① 청소년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

---

- ② 취약가족의 어려움을 메워 주는 가족 도우미

---

- ③ 다문화 가족의 따뜻한 이웃

---



## 과제 1 청소년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.

### 현장의 목소리

◇ “또래상담자들은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고, 고민을 공유하면서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역할을 해요.

**각 교실마다 또래상담자가 활동한다면 사소한 갈등부터 폭력까지 많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.**”(A고교, 또래상담 지도교사)

◇ “아이가 집에서 인터넷 게임만 하고 있어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유익한 체험활동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싶은데, **가까운 곳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없어요.**” (학부모 K씨)

### 국정과제 이행을 통한 변화

- ◆ **학교폭력, 인터넷중독, 학업중단, 가출, 자살 등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.**
- ◆ **청소년들이 자신의 소질과 역량을 개발하도록 다양한 체험활동 참여기회가 제공됩니다.**

# 1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.

## 1 학교폭력 제로환경 조성

- 또래 간 중재, 상담으로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소하는 **또래상담을 확대**하여 학교폭력을 방관하지 않고 협력하여 해결하는 문화 조성

\* ('13) 5,000개교 → ('14) 희망하는 모든 학교(교육부 협조)

\* '12년 또래상담 후 학교생활 만족도(평균 3.48 → 4.11점) 및 학급 응집력(평균 3.21 → 3.94점) 증가

### [또래상담자의 주요 역할]

- 폭력 등 문제발생시 상담·중재를 통해 문제 해소
- 결석이 잦은 학생에게 문자, 전화, 이메일 등 연락 시도
- 학교생활 부적응(왕따 등) 친구와 점심 같이 먹기, 귀가 같이 하기
- 가출우려, 도박 등 위기사례를 교사나 전문상담사에게 알리기

- **117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**(교육부, 경찰청 협력) 및 학교폭력 가·피해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**집단상담, 가족캠프** 추진

## 2 청소년 인터넷 중독 극복 지원

- **상설 인터넷치유학교 운영**으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정도에 맞는 맞춤형 치유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지원

\* 상설 인터넷치유학교 설치('13년)·운영('14년)

\* 상설 인터넷치유학교 3개소 운영 시, 고위험군 대상 정책 서비스 지원율 6.5%→20%로 증가

- **인터넷중독 전담 전문인력을 확충**하여 청소년이 원하는 시기에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

\* 시·도 상담복지센터에 인터넷중독 전담전문인력 배치 추진 : ('13)0명 → ('17)5명

\* 5명 배치시 센터당 1인이 담당하는 중독 청소년 수 : 4,000명 → 800명으로 감소

- 스마트폰 중독 상담·치료 매뉴얼 개발로 체계적이고 믿을 수 있는 치유서비스를 제공하여 중독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
  - \* 상담·치료 매뉴얼 개발('13년), 보급 및 시범 적용('14년)

### ③ 위기청소년 회복 지원

- **학업중단청소년 통합지원프로그램**(학업복귀·자립지원)을 확대하여 검정고시,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교육기회 보장으로 제도약 발판 마련
  - \* ('12) 학업복귀 16개소, 자립지원 49개소 → ('13) 통합프로그램 50개소 → ('17) 100개소
-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허브기관인 **청소년상담복지센터**를 확대하여 상담·보호·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
  - \* 청소년상담복지센터: ('12) 190개소 → ('13) 196개소 → ('17) 215개소
- **청소년쉼터 등 지역 균형배치**로 가출청소년의 성매매·성폭력 범죄 노출 예방 및 자립기회 보장
  - \* 청소년쉼터: ('13.8월) 103개소(11개소 추가설치) → ('17) 170개소
- 청소년들이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**전화·문자·채팅 등 상담 채널을 다양화**하여 일상고민에서 고위기 상담까지 신속한 문제 해결
  - \* 무료전화(1388), 문자(#1388), 채팅(사이버상담센터)
- 우울증, 자해 등 자살위험 청소년에게 찾아가는 상담전문가인 **청소년동반자**를 연계하여 심리적, 정서적 안정 지원 강화
  - \* 청소년 동반자: ('12) 980명 → ('13) 985명 → ('17) 1,700명
- 학교 교사, 상담전문가, 청소년지도사 등을 '**청소년자살예방 지킴이**'로 양성하여 위험징후 조기발견, 대응을 강화하고, 자살예방 교육 확대

## 2 청소년이 역량있고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.

### 1 청소년 체험활동 확대로 창의적 역량개발 지원

- 학교나 집 주변에서 청소년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**청소년 문화의집 확충 및 안전 강화**
  - 청소년수련시설의 **안전점검 및 종합평가를 의무화**하여 청소년이 안전한 체험활동 환경 조성
    - \* 청소년문화의집 : ('12) 219개소 → ('13) 235개소 → ('17) 350개소
- 청소년 스스로 기획·활동하는 체험을 통해 주인의식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**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확대**
  - \* 동아리 : ('13) 2,000개 → ('17) 6,000개, 자원봉사 : ('13) 276만명 → ('17) 335만명  
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: ('13) 2만명 → ('17) 5만명, 문화존 : ('13) 126개소 → ('17) 200개소
  - **우수 프로그램 발굴·확대로** 유익하고 재미있는 체험프로그램 제공
    - \* 분야 : 문화·예술, 과학·환경, 가족·인성, 봉사·진로, 인증수련활동 등
- 소외계층 청소년이 사회적 지지를 통해 용기를 얻고 성장할 수 있도록 **민간과의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**
  - \* 삼성·동아일보 열린장학금, 취약계층 청소년 셀프가드(스스로 지킴이) 캠프, MBC 방송국 체험활동프로그램 등

### 2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

- **청소년 국제교류 인원을 확대**하고, 소외계층 청소년 등 참여 확대
  - \* 교류인원 : ('13) 1,614명 → ('17) 1,800명
  - \* 소외계층 청소년 참여비율 : ('13) 20% 이상 → ('17) 25% 이상
  - **학업중단 및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 해외자원봉사파견 ('13.8월) 등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 확대**
    - \* 위기청소년 해외자원봉사 파견횟수 : ('13) 2회 → ('17) 10회

## 과제 2 취약가족의 어려움을 메워주는 따뜻한 가족도우미가 되겠습니다.

### 현장의 목소리

- ◇ “22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미혼모입니다. 가정법원 양육비 소송에서 '생부는 양육비를 지급하라'는 판결을 받았으나, 양육비를 보내지 않아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듭니다.” (한국미혼모가족협회 회원 허○○님)
- ◇ “부자가족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부모 가장입니다. 작년엔 벌이가 괜찮아 복지시설에서 퇴소하게 되었지만 살만한 집 보증금이 없습니다. 시설에 거주하면서 좀 더 돈을 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” (부자가족복지시설 거주자)

### 국정과제 이행을 통한 변화

- ◆ '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기관'을 설치하여 자녀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.
- ◆ 한부모가족·미혼모가족의 양육비 인상, 주거 지원 등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내실화 하겠습니다.

# 1 한부모가족, 미혼모가족의 아동양육을 지원하겠습니다.

## 1]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

- 아동양육비를 체감 가능한 수준까지 연차적으로 인상  
\* ('12) 아동당 월 5만원 → ('13) 아동당 월 7만원
- 시설입소 중 소득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일정금액 이상 자립준비금을 저축한 경우 퇴소유예제도 도입
- 병역의무 복무 자녀는 복무기간 만큼 지원기간 연장  
\* 현행 만22세 미만 → (병역의무 2년) 만 24세 미만까지 상향
- LH공사 등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확보하여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적은 월세로 살 수 있는 주거공간 지원  
\* 임대보증금을 정부가 지원(호당 700만원 내외)하는 공동생활가정형
- 한부모가족 유형별·생애주기별 입체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「한부모가족 지원 종합대책」 수립('13.11월)

## 2]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강화

-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한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  
\* 법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 후 정기적인 이행비율 26.3%에 불과(전체 이혼가정의 양육비 지급비율은 5.6% 정도로 추정)

가사소송법 개정('09.11월) 등으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감치제도 등 개선이 있었으나, 부양의무자가 소식을 끊거나 직장을 옮기는 등의 경우 여전히 이행이 어려운 상황

\*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행정기관 형태의 '양육비 이행지원 전담기구'를 설치·운영(미국의 OCSE, 호주·영국의 CSA 등)

-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지급 당위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 
\* 「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기관 설치에 관한 법률」 국회 계류중('13.2월)

### ③ 미혼모가 스스로 자립하여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 개선

- 사회공헌사업 등 **민관협력을 통해 정부 미지원(입소기간 종료로 시설퇴소 등) 미혼모의 자립지원**
  - 시설퇴소 미혼모 전·월세비 지원,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, 취업·창업 훈련매장 운영 및 자립 저축계좌 마련 등
- 원가족과 단절 경우가 많은 미혼모 맞춤형 정책개발·추진
  - 시설입소 미혼모 아이돌봄을 위해 미혼모시설내 '**공동돌보미**'제 도입
    - \* 미혼모자시설 신축·개축, 기능보강시 공동육아방 설치비 지원
  - 재가 미혼모의 취학전 자녀에 대해 **돌봄시간 확대**

## 2 부모교육을 확대하고, 가족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.

- 자녀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**생애주기별 부모교육**
  - 지역 내 아동·청소년 **유관기관 연계 부모교육 실시**
    - \* 부모교육 : ('13) 40만명 → ('17) 100만명
    - \* 보육시설, 유치원, 초등학교, 청소년수련시설 네트워크 구축
  - 정부 및 공공기관, 가족친화기업 등 직장교육에 부모교육과정 개설·운영
  - 청소년 인성 함양을 위한 휴마트 **인성교육 민관공동 캠페인**
    - \* 중앙일보, 교육부, 교원그룹 등 11개 기관과 협약식(3.22)
  - **부모교육 전문강사풀 구성**
- 가족갈등을 해소하고, 가족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**가족상담**
  - \* 상담인원 : ('13) 24만명 → ('17) 80만명
  - 한부모가족, 가정폭력 등 위기가족의 가족 간 관계개선을 위한 **가족심리치료, 가족참여 프로그램 실시**
    - \* 가족참여 프로그램 : ('13) 1,121가구 → ('17) 3,524가구

### 과제 3 다문화가족의 따뜻한 이웃으로 다가가겠습니다.

#### 현장의 목소리

◇ "제가 결혼 초 도움을 받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했지만, 베트남어 통번역사만 있어서 상담이 어려웠어요.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"

(캄보디아 결혼이민자 B씨)

◇ "저는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였는데, 아내가 한국말이 서툴러서인지 아이가 다른 아이에 비해 말이 무척 늦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."

(베트남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C씨)

#### 국정과제 이행을 통한 변화

- ◆ 국제결혼이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은 물론, 결혼이민자의 현지사전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.
- ◆ 우리사회의 다음 세대인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.

# 1 다문화가족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.

## 1] 건전한 국제결혼문화 조성

- 입국전 결혼의 진정성 확보를 위한 현지사전교육 내실화 및 확대 추진(5개국 7개소)
  - \* 사전교육 3개국 5개소 운영 : 베트남(하노이, 호치민, 껀터), 필리핀, 몽골
- 건전한 국제결혼문화 조성을 위한 법·제도 개선
  - \*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요건 및 신상정보제공 강화 등 법령 개정
- 불건전 관행 개선을 위한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 감독 강화
  - \* 중개업체 증감현황 : ('10) 1,253개 → ('11) 1,519개 → ('12) 1,370개
- 국제결혼 피해예방 및 혼인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 국제결혼 이민관 역할 제고 및 파견 확대
  - \* 현재 국제결혼이 가장 많은 베트남(한국대사관)에 국제결혼이민관 1명 파견

## 2] 다문화가족의 초기 적응 지원 강화

-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2개소 신설을 통해 접근성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('13.1~7월)
  - \*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충: ('12) 200개소 → ('13) 212개소
- 위기 다문화가족에게 지역사회와 다양한 지원망을 연계한 통합적인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('13.3월)
  - \*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문사례관리사 50명 시범 배치
-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을 위한 “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콜센터” 운영 체계 마련
  - \*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개정을 통해 설치·운영 규정 마련('13) → 현재 운영 중인 다누리 콜센터(1577-5432) 확대 개편('14)

### ③ 다문화가족 자녀의 맞춤형 교육 지원

- 초등학생 이하 자녀 언어(한국어)발달 지원서비스 확대(언어발달 지도사 200명 → 300명)를 통해 서비스 접근성 제고
- 엄마(아빠)나라 언어·문화 교육을 위한 ‘언어영재교실’ 운영으로 자녀의 긍정적 자아 형성 및 향후 ‘아시아 브릿지’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지원(‘13.3월~)
- 초등학교 입학전 생활지원, 입학 후 학교적응 및 기초학습 지원을 위한 방문 돌봄 서비스 제공(‘13.2월~)
  - \* 다문화가족 자녀 친구관계 취약·학습관련 활동 저조(‘12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)
  - \* 다문화가족 가족생활지도사 1,400명 배치
- 이주배경청소년의 입국초기 한국어, 문화이해, 진로 지원 등을 위한 레인보우스쿨 확대하여 한국사회 적응 지원(‘13.3월~)
  - \* 레인보우스쿨 운영 : (‘12) 17개소 → (‘13) 20개소
-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왕따,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일반청소년이 다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(‘13.4월~)하고, 시범운영(4개소, ‘13.9월~) 추진

## 2 다문화를 이해하는 국민의식의 수용성을 높ی겠습니다.

### ① 다문화 이해제고 교육 강화

- 다문화 이해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대상별 교육 강화
  - 일반국민, 청소년, 시설종사자(보육, 복지, 다문화), 경찰, 군인 등 대상별 교육지원
  - \* 결혼이민자 차별경험 : (‘09) 36.4% → (‘12) 41.3%(‘12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)
- 공무원교육원, 법무연수원 등 다문화교육 과정 확대 추진

### ② 다문화가족 수용성 제고 TV 홍보 및 캠페인 전개

- TV 공중파, 온라인,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추진

### 3.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조성



① 성폭력 예방체계 강화

② 성폭력·가정폭력 피해자  
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



## 과제 1 성폭력 예방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.

### 현장의 목소리

- ◇ “실제로 성폭력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, 남자친구와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” (서울 M중학교 3학년 김모양)
- ◇ “이론으로 이렇게 하면 위험하다는 교육은 아무 도움이 안돼요”(학부모)
- ◇ “아이는 어린데 가해자가 금방 출소하는 사례가 많아요.  
가해자가 출소할 때 쫓 되면, 아이들은 굉장히 무서워 한답니다.  
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격리하거나 처벌을 강화해야 해요”  
(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)

### 국정과제 이행을 통한 변화

- ◆ 예방교육 온라인 사이트 운영 등 국민 누구나 손쉽게 예방교육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하여, '성범죄자는 더 이상 설 곳이 없다'는 것을 널리 알리겠습니다.
- ◆ 신상정보 공개로 범죄자 관리를 강화하고,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엄중 처벌되도록 하겠습니다.

# 1 생애주기별 예방교육 체계와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.

## 1 성폭력 예방교육 체계 구축

- 생애주기별 성폭력 예방교육 기반 마련
  - 성폭력 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지원기관 설치·운영('13.4월~)
  - 지원기관을 통해 영유아, 학생, 성인 등 대상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강사를 양성('13.5월~)
  - \*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, 각급 학교 등에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의무화('13.6월 시행)
- 일반국민 등 교육 대상자별 예방교육 접근성 제고
  - 일반국민에게는 온라인교육 사이트를 통해 동영상,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 제공
  - 국가, 지자체 대상 교육은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 과정과 연계(안행부)

## 2 체험형 예방교육 및 성범죄 예방 홍보 강화

- 아동 대상 체험형 예방교육 강화
  - 학교에서의 인권 및 폭력(성폭력, 성교육, 가정폭력 등) 예방 교육 확대
    - \* 5개 시·도 140여개교 초등 5학년생 대상 성인권교육 실시
  -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(('12) 47개소 → ('13) 53개소)로 체험형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, 부모 등 찾아가는 교육 확대
    - \* 버스를 이용한 이동형센터(6 → 10개)를 통해 청소년·학부모 교육 접근성 제고
  - 아동안전지도를 통한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위험환경 개선
    - \* 전국 1,700여개 초등학교(전체학교 30%)에서 아동안전지도 제작('13.4월~)
    - \*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지자체 관계 부서와 연계 강화
- 민간기업 협력을 통한 성범죄 예방 캠페인 전개
  - 극장, TV 등 생활 속 홍보로 여성·아동 폭력에 대한 경각심 제고
    - \* 화장품, 의류 등 여성관련 민간기업과 성폭력 예방 홍보물 배포 등 캠페인 전개

## 2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더욱 엄중히 처벌됩니다.

- 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」 시행('13.6월)으로 성범죄 처벌 강화
  -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형량 상향
    - \* 강간범죄 무기징역 추가, 유사강간, 강제추행, 음란물 제작·배포 등 형량 상향
  - 아동·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반의사 불벌죄 폐지
    - \* 형법상 강간,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도 전면 폐지
- 현행 법령의 사각지대를 보완
  - 16세 미만 아동·청소년 대상 강간범죄 집행유예 배제 검토
    - \* 집행유예가 금지되는 형량(5년 이상 → 7년 이상 유기징역)으로 상향
  -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 단속 강화를 위해 유도수사 기법 도입 검토

## 3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범죄자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.

-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강화('13.6월~)
  - 인터넷 공개정보(읍면동 → 도로명·건물번호까지) 및 우편고지 확대 (지역아동센터, 학교교과교습학원 등), 성범죄자 사진의 정확성 보완 (경찰관서 및 교정시설에서 직접 촬영)으로 정보 접근성 강화
  - 경찰의 신상정보 진위확인 주기 단축(연 1회 → 반기 1회)으로 성범죄자 관리 강화
  - 성범죄자 신상정보 스마트폰 열람 서비스 구축('13.5월~'14.상반기)
-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시설 확대('13.6월~)
  - \* 경비업,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, 청소년활동기획업소, 인터넷 PC방까지 추가

## 과제 2 희망을 주는 피해자 보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

### 현장의 목소리

- ◇ “집이 안성인데, 가까운 곳에 해바라기센터가 없어서 서울 종로까지 치료 받으러 매번 오고 있어요. 왕복 5시간이 넘게 걸려서 힘들어요.”  
(피해 청소년)
- ◇ “우리 큰 아이가 학교에서 성폭행 피해를 받았어요. 큰 애는 치료를 지원해주고 있는데, 둘째 아이도 충격을 받아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아내도 힘들어 하고요. 가족 모두 치료를 도와주면 좋겠어요.” (피해자 아버지)
- ◇ “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. 현장 출입조사권이 있지만 거부하면 마땅히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.”  
(경찰관)

### 국정과제 이행을 통한 변화

- ◆ 폭력 피해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.
- ◆ 아동·여성 폭력피해자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센터를 확대하겠습니다.
- ◆ 가정폭력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.

# 1 성폭력 피해자는 회복될 때까지 지원받게 됩니다.

## 1 성폭력 피해자 치료·회복 지원 강화

-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(부모, 형제자매)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 
\* ('12) 1만여명 지원(의료비 국비 10억원) → ('13) 1만5천명 지원(15억원)
- 시설에서 장애인은 피해 회복시까지,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은 성인(19세) 이후에도 2년간 더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선('13.6월 시행)
- 성폭력 피해아동 심리·정서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('13.6월~)
  - 피해아동별 발달단계에 따른 전문 심리평가를 통한 지원
  - 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아동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 지원  
  - \* ('13) 민간기업 후원(현대자동차)으로 시범 운영 → ('14) 정부 예산 지원

## 2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확대

- 상담, 의료, 법률, 수사 지원을 한 곳에서 모두 제공하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 확대(3개소 신규, 2개소 기능 확충, '13.5~12월)  
\* ('12) 30개소 → ('13) 33개소 → ('17) 60개소
-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전문 인력 추가(21명) 배치 및 여성경찰관 추가 배치로 수사 신속성 확보(여가부, 경찰청)
  -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센터에 상근 배치('13.6월부터 시범운영)하여 신속한 형사 법률지원 및 2차 피해 방지(여가부, 법무부)
  - 아동·장애인 피해자를 위해 진술을 중개·보조하는 진술조력인 양성·배치(여가부, 법무부)  
  - \* ('13) 진술조력인 양성 → ('14~) 통합지원센터 배치

- 피해 장애인, 아동·청소년에게 특화된 지원 시설 확대('13.4월~)
  - \* 장애인보호시설(3 → 6개소), 장애인상담소(18 → 23개소) 신규 지원
  - \* 성폭력 피해 아동·청소년 특별지원시설 확충(2 → 4개소)
-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인권진흥원(재단법인) 특수법인화 검토

## 2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조치와 생활 지원이 강화됩니다.

### 1 가정폭력 사건 초기 피해자 안전 조치 및 지원 강화

- 가해자가 경찰관의 『현장 출입·조사』와 접근금지 명령 등 『긴급임시조치』 거부 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
  - \* 관련법률 개정으로 처벌규정 또는 과태료 규정 신설(국회계류 중)
-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자녀와 생활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개선
  - \* 가해자의 공동주거 사용·처분행위 금지, 자녀면접교섭권 제한 등(관련 법률 국회 계류 중)
-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초기 대응 강화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'가정폭력 대응 실무과정' 운영(여가부, 경찰청)

### 2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가족 지원 확대

- 남아 동반 피해자 가족보호시설 신규설치(8개소) 및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일상 치료비 신규 지원
- 퇴소 후 피해자 자립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 확대(그룹홈 118 → 156호)
- 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시설 지원확대 및 자활지원센터를 통한 자활프로그램 지원
  - \* 1577-1366을 통한 24시간 긴급 상담 지원

## Ⅲ. 부처 간, 민-관 협업 과제

- ① 여성정책조정회의의  
내실 있는 운영

---

- ②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 
통합적 지원

---

- ③ 경력단절여성  
전문 직업능력개발 강화

---

- ④ 여성가족부 3.0

---






# 1 여성정책조정회의의 내실 있는 운영(전 부처)

< 대통령 말씀 (’13. 2. 15.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 토론회) >

“국무총리 산하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, 각 부처에 여성 관련 전담인력을 파견하는 문제도 관련 분과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”

## 1. 필요성

- 여러 부처와 연계된 여성정책의 총괄·조정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 ‘여성정책조정회의’가 운영되고 있으나, 관계부처 합동 의제 발굴 미흡 등으로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곤란
- 여성분야 국정과제 이행 및 여성정책에 대한 관련 부처의 적극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여성정책조정회의 기능 내실화가 필요

## 2. 추진방안

- 여성정책조정회의 다양한 의제 개발
  - 여성 관련 국정과제(9개) 점검, 국제성평등지수 관리 등 추진
    - \* 주요 부처(복지부, 교육부, 기재부, 안행부)에 배치될 여성정책 전담인력(5급 1명) 활용
- 정책분야별 분과회의 운영 및 조정회의 결과 국무회의 보고

정책분야	주요의제(예시)	유관부처
여성정책 관리체계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국제성평등지수(GGI, GII 등) 관리(범부처 협조)</li> <li>▪ 여성관련 공약(19개) 및 국정과제(9개) 점검 등</li> </ul>	기재부 고용부 교육부 복지부
일·가정 양립 환경 조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각종 정부지원 대상 기업 선정시 일·가정 양립, 가족친화 정도를 평가기준에 반영 검토 등</li> </ul>	산업부 중기청
여성 사회참여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여성 고용률 제고</li> <li>▪ 여성인재 10만 양성 방안</li> <li>▪ 정부위원회, 공공기관 등 여성참여율 제고 방안 등</li> </ul>	고용부 교육부 안행부 기재부
안전한 사회 구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생애주기별 성범죄 예방교육체계 추진 등</li> </ul>	법무부 경찰청

## 2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(법무부, 경찰청, 복지부, 교육부)

### 1. 필요성

- 성폭력 피해자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병원에 통합지원 센터 운영 및 여성경찰관 파견
  - 24시간 의료지원에 따른 업무부담, 증거채취에 따른 법정증언, 설치 공간 무상제공 등으로 인해 병원이 센터 설치에 소극적
-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전면 폐지, 진술조력인 등 다양한 피해자 지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계부처 협업 필요

### 2. 추진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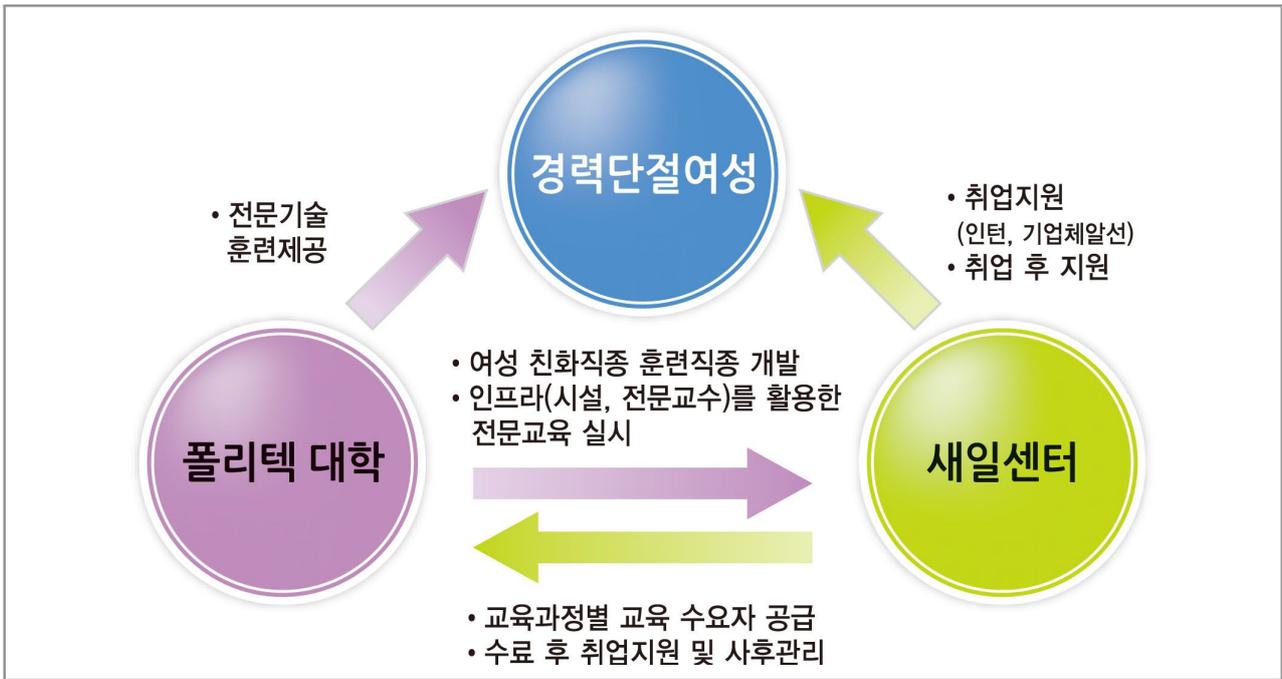
- 통합지원센터 인센티브 발굴 및 경찰인력 확충(복지부, 교육부, 경찰청)
  - 부처간 협력을 통해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 검토
    - \* (여가부) 우수 센터 및 의료진 포상, 의료진 수당 신설 등
  - 피해자 수사지원 강화를 위해 파견경찰 인원 확충(경찰청)
-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(법무부, 경찰청)
  - 성폭력 피해자 개인 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신원관리카드 제도 등 적극 활용(법무부, 경찰청)
  - 피해자가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재판으로도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역할 강화(법무부)
  - 검사와 경찰 등 수사관계자의 여성폭력 인권 인식제고를 위해 자체 인권교육 강화(법무부, 경찰청)
  - 피해자 원스톱지원을 위해 통합지원센터 내 국선변호사, 진술조력인 배치(법무부, 경찰청 협조)

## 1. 필요성

-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 후 잦은 경력 단절 없이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**괜찮은 일자리** 진입 필요
  -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,
    - 기술·IT 등 고부가가치 직종 **훈련과정**은 기자재·전문강사 등 기본 인프라 부족으로 개설이 어려워 **기술인력 양성에 한계**
  - 새일센터 교육환경 등 인프라 부족으로 실시가 어려운 직종에 대하여 **폴리텍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훈련과정 확대 필요**
- 또한, 새일센터와 고용센터가 별도의 일자리 시스템으로 일자리를 연계하고 있어 **구직자 대상 통합된 정보 제공을 위해 시스템 통합 필요**

## 2. 추진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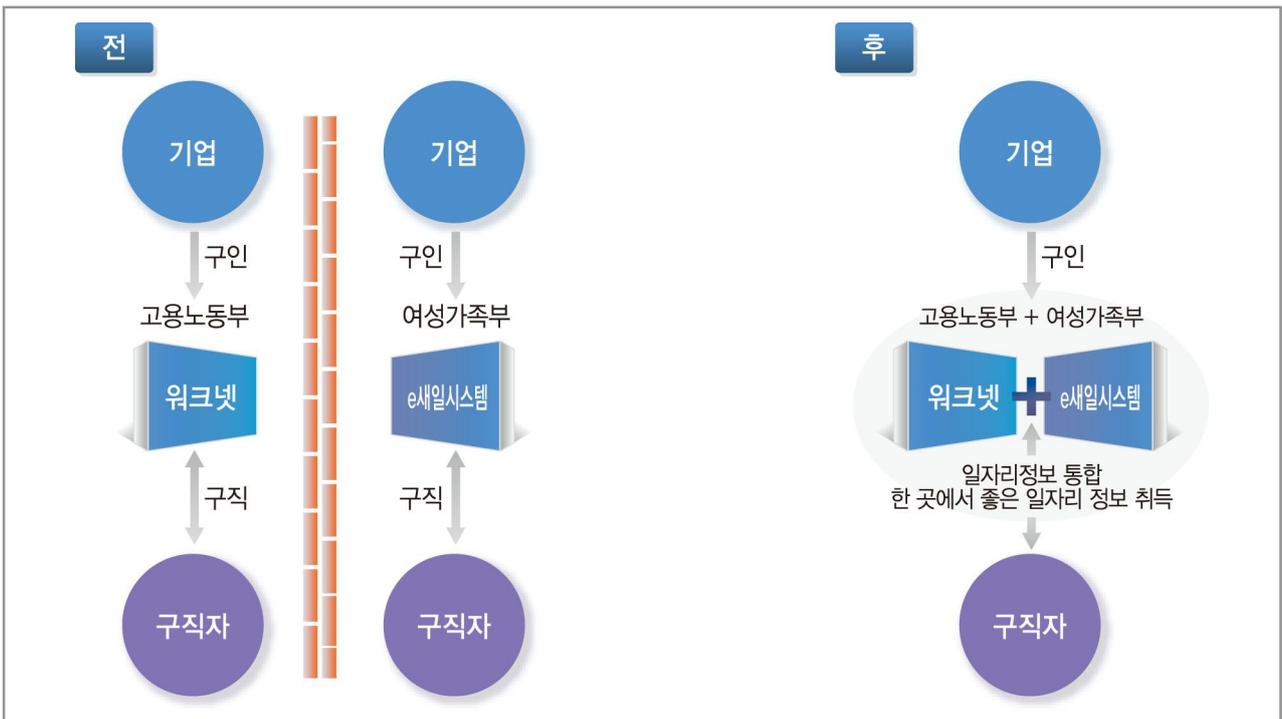
- 경력단절여성의 **전문 직업능력 개발**을 통한 **양질의 일자리** 취업을 위해 **고용부 산하 폴리텍대학과 연계한 직업교육훈련** 추진
  - 폴리텍대학의 산업 인력 양성 노하우와 새일센터의 취업지원 노하우를 연계한 **훈련과정 실시**(’13년도 시범실시 후 사업 확대)
    - \* 폴리텍대학 **연계 훈련과정 확대**를 위한 **여가부-고용부 간 협약 체결**(’13.3월)



○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및 질 좋은 일자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정보망인 e새일시스템(새일센터)과 워크넷(고용센터) 연계 추진

- 일자리 시스템 연계로 수요자에게 통합된 일자리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 가능

\* 워크넷과 e새일시스템 통합 연계('13.5월 시범운영, 6월 개통)



## 4 여성가족부 3.0

### 1. 필요성

- 국민들의 서비스 정보 접근성 차이에 따른 편차로 인해 정책 사각지대 발생
  - 일자리, 아이돌봄 등 관련 시설, 단체 및 사업별로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가 개별화
- IT 기술 발전과 시민의식 성숙으로 정부와 시민단체, 기업 및 시민 개인들 간 소통과 협치에 대한 요구 증대

### 2. 추진방안

- 여성·가족과 소통하는 맞춤형 종합 서비스 정보 제공
  - 여성, 청소년, 가족의 요구가 높은 교육, 일자리, 위기 지원 등 서비스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
    - 공급자 위주의 정보 제공 → 수요자 위주의 맞춤형 정보 연계
    - \* 여성가족부를 방문하면 여성과 가족의 “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 가능”한 사이트 지향

<여성, 청소년, 가족의 주요 요구 분야>

교육	도움	일자리
성인권교육, 부모교육, 다문화이해교육 등 · 프로그램, 교재, 매뉴얼, 동영상 등의 콘텐츠 제공 ·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의 교육기관 사이트 연결	폭력피해자, 한부모, 다문화가족, 위기청소년 지원 등 · 지원대상, 범위 등의 서비스 정보 · 지원기관 링크 및 지리정보 (“행정서비스 맵” 제작·활용)	아이돌보미, 취업설계사, 시설 상담원 등 여성·가족 관련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보 · 직종 및 주요업무, 자격기준 등 정보 제공

## □ 민간(일반국민, 기업) 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네트워크

- 기부자와 수혜자를 연계해 주는 '온라인 기부포털'을 구축, 취약한 여성·가족의 요구와 문제를 해결하고 나눔·소통·행복의 가치 확대
  -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 및 기부서비스(물품, 자원봉사, 재능기부 등)에 대한 정보 공유
    - \* 나눔후기 소개, 감사의 글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여 나눔동기를 부여하고, 정책 홍보의 매개체로 활용
- 민간기업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를 통해 촘촘한 서비스망 구축 및 나눔문화 확산
  - \* 삼성사회봉사단 열린장학금, 포스코 다누리콜센터 운영, 현대자동차 희망샘물사업 등 13개 사업 약 73억원 규모의 사업 추진 중('13.3월 현재)

### < “여성·가족 행복나눔 포털”을 통한 서비스 연계 >

